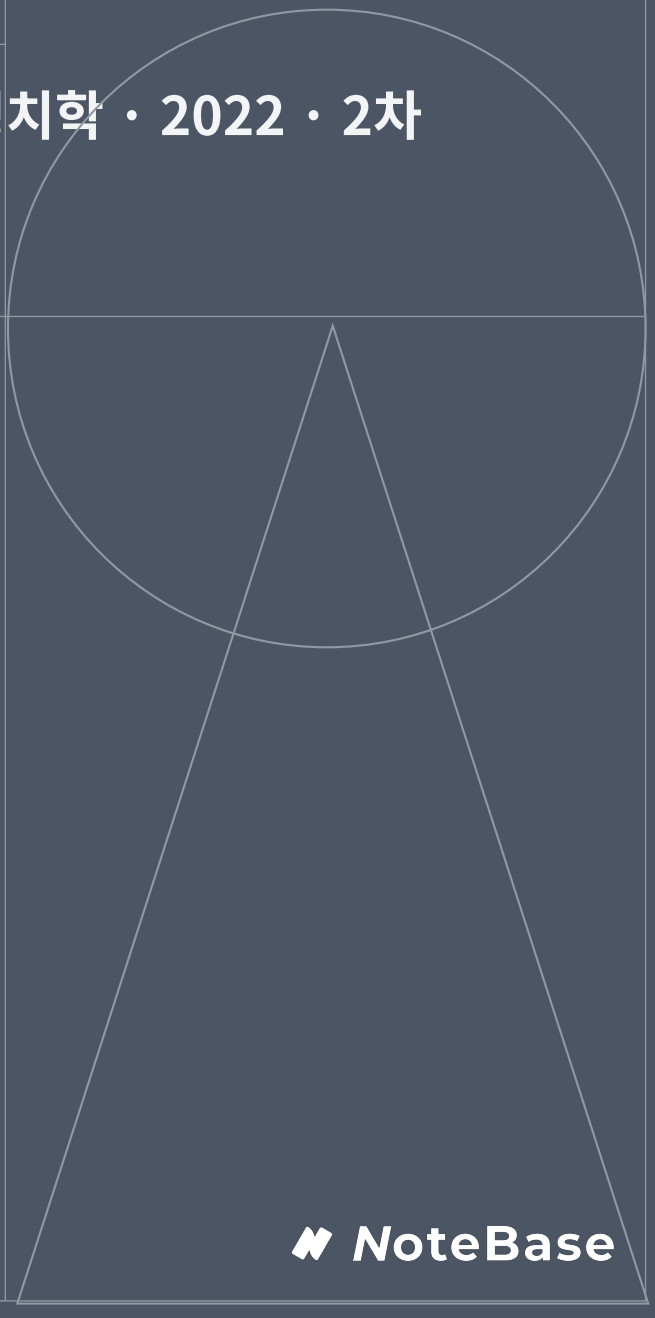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2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2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2 · 2차

문 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경제기구의 구제금융은 수혜 국가에게 혜택과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② 세계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본부가 워싱턴 D.C.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③ 무역자유화를 강조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반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음모라고 비판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워싱턴 컨센서스는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기반 국제경제 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묶음이다. 핵심 방향은 국가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시장 친화적 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국제경제기구의 구제금융은 외환위기나 재정위기 국가에 자금을 공급하는 혜택이 있지만, 긴축재정·구조조정·시장개방 같은 조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혜국에는 상당한 부담도 준다.
2번 O: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명칭은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처럼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경제 정책 주도 세력을 배경으로 나온 표현이므로 옳다.
3번 X: 틀린 부분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자유화도 중시한다. 올바르게는 "무역자유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가 된다.
4번 O: 반세계주의자나 반신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 또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 패키지로 비판해 왔다. 이 선지는 그러한 비판적 인식을 설명한 것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무역자유화라는 단어를 보고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제한을 주장한다고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대외개방을 한 묶음으로 본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긴축재정처럼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과 대외개방을 넓히는 방향인지부터 확인한다. 선지에 보호주의, 투자 제한, 국가 통제 강화가 나오면 워싱턴 컨센서스와 반대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긴축재정,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투자 자유화의 묶음이다.

NoteBase

문 2. 제2 이미지 역전(Second Image Reversed)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내의 속성을 통해 대외정책을 설명한다.
ㄴ. 국내 구조와 정치과정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ㄷ. 왈츠(Kenneth Waltz)가 제1, 제3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ㄹ. 국제적 요인이 어떻게 국내정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2 이미지와 제2 이미지 역전의 인과 방향 차이, 그리고 제2 이미지 역전의 이론적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월츠의 제2 이미지는 국내 정치의 속성과 구조를 통해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제2 이미지 역전은 국제 체제와 국제적 압력이 국내 정치구조와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인과 방향이 국내→대외인지, 국제→국내인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ㄷ의 조합이다. ㄱ의 "국가 내의 속성을 통해 대외정책을 설명한다"는 월츠의 제2 이미지 설명이므로 틀리다. 제2 이미지 역전은 국제 요인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ㄷ의 "월츠가 제1, 제3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도 틀리다. 제2 이미지 역전은 월츠의 세 이미지 틀 자체가 아니라 그 인과 방향을 뒤집어 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2번 X: ㄱ, ㄹ의 조합이다. ㄹ의 "국제적 요인이 국내정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그러나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ㄱ은 "국가 내의 속성을 통해 대외정책을 설명한다"가 아니라 "국제 요인이 국내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로 고쳐야 한다.
3번 X: ㄴ, ㄷ의 조합이다. ㄴ의 "국내 구조와 정치과정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제2 이미지 역전은 국내정치를 외생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본다. 그러나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ㄷ은 "월츠가 제시하였다"가 아니라 "월츠의 제2 이미지를 뒤집어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관점이다"로 고쳐야 한다.
4번 O: ㄴ, ㄹ의 조합이다. ㄴ은 국내 구조와 정치과정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고, ㄹ도 국제 요인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옳다. 제2 이미지 역전의 핵심을 정확히 묶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제2 이미지와 제2 이미지 역전의 방향을 바꾸어 읽게 만드는 데 있다. "역전"이라는 표현을 놓치면 ㄱ을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고, 월츠의 세 이미지 틀과 제2 이미지 역전을 같은 것으로 섞으면 ㄷ까지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인과 화살표의 방향을 확인하면 된다.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을 설명하면 제2 이미지이고, 국제정치가 국내정치를 설명하면 제2 이미지 역전이다. 그다음 원래 월츠의 세 이미지 틀인지, 그 틀을 뒤집어 응용한 관점인지를 구분하면 정답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제2 이미지 = 국내→대외, 제2 이미지 역전 = 국제→국내.

NoteBase

문 3. 1940년대 외교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소련의 베를린 봉쇄
(나)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
(다) 마샬플랜 발표
(라) 트루먼 독트린 발표

① (가)→(다)→(라)→(나)
② (나)→(다)→(라)→(가)
③ (나)→(라)→(다)→(가)
④ (라)→(가)→(다)→(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40년대 냉전 초기의 주요 외교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원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1946)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서 진영 대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 트루먼 독트린 발표(1947) -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공식화한다.
3. 마셜플랜 발표(1947) - 서유럽 경제 재건을 통해 봉쇄정책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한다.
4. 소련의 베를린 봉쇄(1948) - 서방의 독일 통합 및 통화개혁에 대응해 베를린 육상 통로를 차단한다.

왜 이 순서인가: 처칠 연설이 냉전 인식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이 봉쇄정책을 정치·경제적으로 구체화한 뒤, 이에 대한 소련의 대응으로 베를린 봉쇄가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1948년에 일어났으므로 1946년의 처칠 연설, 1947년의 마셜플랜·트루먼 독트린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베를린 봉쇄가 가장 먼저'라는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나) → (라) → (다) → (가)'이다.

② X: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은 1946년이고 마셜플랜은 1947년이므로 (나)는 (다)보다 앞서야 한다. 틀린 표현은 '(다)가 (라)보다도 앞선다'는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나) → (라) → (다) → (가)'이다.

③ O: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1946) 이후 트루먼 독트린(1947), 마셜플랜(1947), 베를린 봉쇄(1948) 순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연대 배열이다.

④ X: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발표이고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은 1946년이므로 (라)가 (나)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표현은 '트루먼 독트린이 가장 먼저'라는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나) → (라) → (다) → (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이 모두 등장하므로 둘의 상대적 순서를 헷갈리기 쉽고, 베를린 봉쇄를 냉전의 상징 사건으로만 기억해 앞쪽에 배치하는 오류도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은 '상징적 선언 → 정책 발표 → 경제원조 → 소련의 대응' 흐름을 잡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냉전 초기 순서 문제는 먼저 1946년의 인식 전환 사건을 잡고, 1947년의 미국 봉쇄정책 관련 사건을 묶은 뒤, 1948년 이후의 직접 충돌 사건을 뒤에 배치하면 정리가 된다.

암기 포인트

철의 장막(1946) → 트루먼 독트린(1947) → 마셜플랜(1947) → 베를린 봉쇄(1948) 흐름으로 외교 선언, 봉쇄정책, 경제원조, 소련 대응 순서가 이어진다.

NoteBase

문 4.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규정한 민족과 민족주의는?

①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

② 전승된 공동체(inherited community)

③ 창조된 공동체(created community)

④ 전환된 공동체(transformed communit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 개념을 대표 키워드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 민족은 구성원들이 서로 대부분 직접 알지 못해도 같은 공동체라고 마음속에서 상정하는 정치적 공동체이다.
핵심은 허구라는 뜻이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소속감과 연대가 상상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뜻이다.
혈연과 전통이 본래부터 이어졌다고 보는 원초주의적 이해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앤더슨의 대표 개념은 상상된 공동체이다. 민족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동일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상상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번 X: 틀린 표현은 '전승된 공동체'이다. 이는 혈연, 전통, 역사적 계승을 본질로 보는 원초주의적 표현에 가깝고, 앤더슨은 민족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상상된 공동체'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창조된 공동체'이다. 앤더슨 이론이 민족의 사회적 구성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그의 정식 개념어는 '창조된'이 아니라 '상상된'이다. 올바르게는 '상상된 공동체'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전환된 공동체'이다. 이는 앤더슨의 민족 정의와 연결되지 않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로 본다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민족은 만들어진다'는 넓은 의미만 기억하면 3번의 '창조된 공동체'가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 문항은 사회적 구성성 일반이 아니라 앤더슨의 정확한 대표 용어를 묻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상가 매칭 문제에서는 문장 전체를 해석하기보다 학자명과 대표 개념어를 먼저 연결해 판단한다. 앤더슨이 보이면 곧바로 '상상된 공동체'를 떠올리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앤더슨 =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이다.

NoteBase

문 5. 핀모어(Martha Finnemore)와 시킨크(Kathryn Sikkink)의 규범의 생활주기(life cycle of nor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범은 적절한 국가 행동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② 규범의 생활주기는 규범 출현과 규범 폭포, 규범 내면화의 3단계로 구성된다.

③ 규범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규범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두려움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

④ 규범 출현 단계에서 규범 주장자들이 새로운 규범을 성공적으로 출현시키기 위해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설득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너모어와 시킨크의 규범 생활주기에서 각 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특히 규범 내면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범은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적절하다고 여겨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집합적 기대이다.
규범 생활주기는 규범 출현, 규범 폭포, 규범 내면화의 3단계로 전개된다.
규범 출현은 규범 주창자들이 설득을 통해 새 규범을 퍼뜨리는 단계이고, 규범 폭포는 다수 행위자가 정당성·평판·동조 압력 속에서 규범을 빠르게 수용하는 단계이며, 규범 내면화는 그 규범이 너무 당연해져 별도의 논쟁 없이 받아들여지는 단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규범은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피너모어와 시킨크도 규범을 적절한 행동의 기준으로 본다.

② O
규범 생활주기를 규범 출현, 규범 폭포, 규범 내면화의 3단계로 설명한 것은 해당 이론의 기본 구조와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제재의 두려움 때문에"이다. 규범 내면화 단계에서는 제재가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연스럽게 준수하게 된다.

④ O
규범 출현 단계에서 규범 주창자들이 새로운 규범을 확산시키는 핵심 수단은 설득이다. 이 단계는 아직 규범이 보편화되기 전이므로 담론과 설득이 중요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규범 폭포 단계와 규범 내면화 단계를 뒤섞은 함정이다. 제재 회피나 평판 관리 때문에 따르는 모습은 내면화 이전 단계의 동조 논리에 가깝고, 내면화는 규범이 자명한 상식처럼 굳어진 상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범 생활주기 문제는 각 단계의 준수 이유를 먼저 본다. 설득이면 규범 출현, 사회적 압력과 정당성 추구이면 규범 폭포, 당연시되어 자동적으로 따르는 상태이면 규범 내면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출현은 설득, 폭포는 확산, 내면화는 당연시이다.

NoteBase

문 6. 테러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정치적 · 이념적 폭력행위로 규정된다.

② 테러리즘의 폭력적 전술은 인질 납치, 비행기 납치, 폭파, 무차별 공격 등을 포함한다.

③ 테러조직 보코하람(Boko Haram)의 납치사건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반감과 분노 때문이다.

④ 테러리즘의 주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러리즘의 일반적 정의, 주요 전술, 목적, 그리고 보코하람 사례의 배경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테러리즘: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조성하는 폭력이다. 키워드는 정치적 목적, 상징적 폭력, 심리적 위압이다.
보코하람: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다. 키워드는 반서구 교육, 반정부 성향, 국내 치안 불안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테러리즘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이해된다. 단순 범죄와 달리 공포 조성과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옳다.
2번: O. 테러리즘의 전술에는 인질 납치, 항공기 납치, 폭파, 민간인 대상 무차별 공격이 포함된다. 비정규적 수단으로 공포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옳다.
3번: X. 틀린 표현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반감과 분노"이다. 보코하람의 납치사건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서구 교육 노선, 국가 통치 실패와 연관되어 이해하는 것이 맞다.
4번: O. 테러리즘은 공포 확산을 통해 정부와 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3번은 국제정치의 대외경제 갈등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코하람을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연결한 점이 함정이다. 보코하람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라는 기본 배경을 놓치면 외부세력 반발 서사로 잘못 읽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러 관련 선지는 먼저 목적이 정치적·이념적인지, 다음으로 수단이 공포 조성과 비정규 폭력인지, 마지막으로 대표 조직의 활동 배경이 국내 급진주의인지 국제경제 갈등인지 순서대로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의 공포 폭력이고, 보코하람은 중국 견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기반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다.

NoteBase

문 7.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냉전기간 동안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② 평화유지활동의 초점이 과거 소극적 평화의 구현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적극적 평화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③ 평화유지활동은 「UN 헌장」 6장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7장에 명기된 군사적 조치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UN 헌장」 6.5장이라고도 한다.

④ 탈냉전 시기의 평화유지활동은 지역기구와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N 평화유지활동의 시기별 성격과 '6.5장'이라는 개념적 위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소극적 평화는 일단 전투를 멈추고 휴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평화이다. 적극적 평화는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줄이고 제도 구축, 인권, 선거 지원까지 포함하는 평화이다. UN 평화유지활동은 헌장에 명문 규정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6장과 7장 사이의 실천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흔히 'UN 헌장 6.5장'이라고 부른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병력'이다. 냉전기 평화유지군은 강대국 정규군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중소국, 비동맹국, 비상임국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중립성과 수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했다.
2번: O. 초기 평화유지활동은 휴전 감시, 완충지대 유지처럼 소극적 평화에 가까웠다. 탈냉전기에는 선거 지원, 행정 재건, 인권 보호, 평화구축까지 포함하는 다차원 임무로 넓어지면서 적극적 평화 요소가 강화되었다.
3번: O. 평화유지활동은 UN 헌장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루는 6장과 군사적 강제조치를 다루는 7장 사이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6.5장'이라고 부른다.
4번: O.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은 UN 단독 활동을 넘어 지역기구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NATO 등과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작전이 대표적이다.

오답 포인트

냉전기 평화유지활동을 '강대국이 직접 병력을 보내 통제한 활동'으로 오해하면 1번에 끌린다. 이 문항은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의 중간적 성격을 함께 섞어 놓고 틀린 문장을 찾게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화유지활동 문제는 먼저 냉전기인지 탈냉전기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휴전 감시 중심인지, 국가 재건과 평화구축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유지활동은 6장의 평화적 해결과 7장의 강제조치 사이에 있는 실천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냉전기 PKO는 중립적 중소국 병력, 탈냉전기 PKO는 다차원 임무와 지역기구 협력이라는 흐름이다.

NoteBase

문 8. 재니스(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단사고는 관료집단 내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 진작되고 유지된다.
ㄴ. 피그만 침공사건은 집단사고에 의해 실패한 정책결정 과정의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ㄷ. 집단사고는 정책 목표 및 정책안들의 과도한 생략, 미흡하고 선택적인 정보처리 등으로 발생한다.
ㄹ. 집단사고의 징후는 특정 정책안에 대한 의견일치의 추구 및 압박의 존재, 정책안에 대한 집단적 합리화, 반대자에 대한 부정적 압박의 존재 등을 포함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니스의 집단사고 이론에서 발생 조건, 대표 사례, 증상과 정책결정 결함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와 내부 결속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비판적 검토가 약화되는 현상이다.
재니스는 강한 지시적 지도자, 외부와의 고립, 반대 의견 억압 같은 조건에서 집단사고가 촉진된다고 보았다.
피그만 침공사건은 집단사고로 인한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자주 제시된다.
집단사고의 결과로 정책 목표와 대안의 검토가 부실해지고, 정보 탐색이 미흡하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함이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ㄹ의 조합인데 ㄱ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의 틀린 표현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이다. 올바르게는 강한 지시적 지도자가 있을 때 집단사고가 촉진되기 쉽다. ㄹ은 의견일치 압력, 집단적 합리화, 반대자 압박이라는 전형적 징후를 설명하므로 맞다.
2번 X: ㄴ, ㄷ의 조합인데 ㄹ이 빠져 있어 오답이다. ㄴ은 피그만 침공사건을 집단사고의 대표 사례로 본다는 점에서 맞고, ㄷ도 대안과 목표의 불충분한 검토와 선택적 정보처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맞다. 그러나 ㄹ도 맞는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불완전하다.
3번 X: ㄱ, ㄷ, ㄹ의 조합인데 ㄱ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 ㄷ과 ㄹ은 각각 정책결정 결함과 집단사고의 징후를 옳게 설명한다. 반면 ㄱ은 집단사고의 발생 조건을 반대로 서술했다. 틀린 표현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이고, 올바르게는 강한 지도자의 존재가 집단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
4번 O: ㄴ, ㄷ, ㄹ의 조합으로 맞는 진술만 묶은 정답이다. ㄴ은 대표 사례, ㄷ은 정책결정 과정의 결함, ㄹ은 집단사고의 징후를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조건을 뒤집어 읽으면 조합형 보기 전체를 잘못 고르게 된다. 집단사고는 지도자가 약할 때보다 강한 지시적 지도자가 있을 때, 그리고 반대 의견이 눌릴 때 더 잘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니스 문제는 발생 조건, 징후, 결과적 정책결정 결함, 대표 사례를 나누어 본다. 강한 지도자와 의견일치 압력은 촉진 조건과 징후로, 피그만 침공사건은 사례로, 대안 검토 부족과 선택적 정보처리는 결과적 결함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재니스 집단사고는 강한 지도자와 만장일치 압력, 피그만 침공사건, 대안 검토 부족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냉전 시기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쿠바 미사일 위기
(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다) 중국과 소련의 우수리강 분쟁
(라) 미중 간의 상하이공동성명

① (가) → (다) → (라) → (나)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라) → (가) → (나)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냉전 시기 주요 사건의 연도 선후관계와 미중소 관계 변화의 흐름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가) 쿠바 미사일 위기 - 1962년 미소 간 핵대결이 최고조에 이른 사건이다.
2. (다) 중국과 소련의 우수리강 분쟁 - 1969년 중소 갈등이 무력충돌로 드러난 사건이다.
3. (라) 미중 간의 상하이공동성명 - 1972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보여 준 사건이다.
4. (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 1979년 소련의 군사개입으로 신냉전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왜 이 순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으로 가장 이르고, 우수리강 분쟁은 1969년, 상하이공동성명은 1972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9년이므로 이 연도 배열이 그대로 정답을 가른다.

선지별 해설

① O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1962) → 우수리강 분쟁(1969) → 상하이공동성명(1972) →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의 순서이므로 맞는 배열이다.
② X이다. 틀린 부분은 (나)를 맨 앞에 둔 점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9년으로 네 사건 중 가장 늦다. 올바르게는 (가) → (다) → (라) → (나)이다.
③ X이다. 틀린 부분은 (다)를 맨 앞에 두고 (가)를 그 뒤에 둔 점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이고 우수리강 분쟁은 1969년이므로 선후가 바뀌었다. 올바르게는 (가) → (다) → (라) → (나)이다.
④ X이다. 틀린 부분은 (라)를 맨 앞에 둔 점이다. 상하이공동성명은 1972년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와 우수리강 분쟁보다 늦다. 올바르게는 (가) → (다) → (라) → (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하이공동성명과 우수리강 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상대적 순서를 흐리게 기억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미중 화해의 상징인 상하이공동성명을 1960년대 사건으로 착각하거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데탕트 이전 사건으로 착각하는 함정을 노린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냉전 연표 문제는 각 사건을 대표 연도에 먼저 고정한 뒤 배열한다. 이 문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 1969년 중소 우수리강 분쟁 → 1972년 상하이공동성명 →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판단하면 바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쿠바 1962 → 우수리 1969 → 상하이 1972 → 아프간 1979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0. 러셋(Bruce Russett)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대방의 존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비폭력적으로 접근한다.
ㄴ.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ㄷ.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여론 등의 제도적 요인은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
ㄹ. 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되면 전쟁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러셋의 민주평화론을 규범, 제도, 상호의존의 세 설명 축으로 나누어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러셋의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핵심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상대의 권리와 존재를 존중하는 민주적 규범이 비폭력적 해결을 선호하게 만든다. 둘째,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여론 같은 제도적 제약이 전쟁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경제적 상호의존이 커질수록 전쟁의 기회비용이 커져 대화와 타협의 유인이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민주주의 국가들 상호 간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② X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ㄷ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여론 같은 제도적 요인이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설명으로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ㄴ을 빼고 ㄱ, ㄷ, ㄹ이다.

③ X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이 빠져서 오답이다. ㄱ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대의 존재와 권리를 존중하며 비폭력적으로 접근한다는 규범적 설명으로 민주평화론의 핵심 내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④ O
ㄱ은 민주적 규범, ㄷ은 제도적 제약, ㄹ은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민주평화론의 대표 설명에 해당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ㄴ의 적용 범위를 넓혀 읽는 것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대 비민주주의 전체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 상호 간 평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ㄹ도 자유주의 일반론으로만 처리하면 놓치기 쉬운데, 러셋은 상호의존이 전쟁의 기회비용을 높인다는 점을 민주평화의 보강 논리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주평화론 문제가 나오면 먼저 평화의 대상이 민주주의 국가 상호 간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이유를 규범, 제도, 상호의존으로 나누어 선지가 어느 축의 설명인지 대응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끼리 평화이고 근거는 규범, 제도, 상호의존이다.

NoteBase

문 11. 정부 간 국제기구(IGOs)와 비정부기구(NGOs)의 협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정부기구는 국가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② 비정부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 간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③ 유엔총회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일반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roster) 협의 지위'를 부여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협력 방식, 특히 유엔 체계에서 NGO 협의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조약이나 합의로 만든 공식 국제조직이고, 비정부기구는 정부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조직이다.
양자의 협력은 감시와 정보제공, 프로젝트 수행, 회의 참여와 의견 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엔에서 NGO의 일반적 협의 지위·특별 협의 지위·명부상 협의 지위는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부여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비정부기구는 인권, 환경, 군축 등의 분야에서 국가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규범을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며 여론을 형성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2번: O. 비정부기구는 유엔기구 등 정부 간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현장 사업이나 개발·구호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유엔총회는 … 협의 지위를 부여하여'라는 표현이다. 일반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 협의 지위는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NGO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부여한다.
4번: O. 정부 간 국제기구는 NGO에 협의지위나 옵서버 참여 기회를 주어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으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대표성·정당성·투명성을 높이기도 한다.

오답 포인트

3번은 '유엔'이라는 큰 틀만 기억한 수험생이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를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협의지위의 종류 자체는 맞지만, 그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와 NGO 협력 문제는 먼저 협력 방식이 감시인지, 사업 수행인지, 회의 참여인지 구분하고, 제도적 지위가 나오면 그것을 부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면 된다. 유엔의 NGO 협의지위가 나오면 ECOSOC를 떠올리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NGO는 감시자이자 사업 파트너이고, 유엔 NGO 협의지위는 총회가 아니라 ECOSOC의 권한이다.

NoteBase

문 12. 주요 군비통제협정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탄도탄요격미사일통제조약(ABM): 미국과 소련의 탄도탄요격미사일 숫자 제한

② 전략무기제한협정 I (SALT I):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를 제한하고 1972년 수준으로 ICBM동결

③ 전략무기감축협정 I (START I):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 폐기

④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냉전기 주요 군비통제협정의 대상 무기와 규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BM 조약은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제한한 협정이고, SALT I는 전략무기 수를 동결한 협정이며, START I는 전략핵무기를 감축한 협정이다. 유럽 내 중거리 핵무기 전면 폐기는 START I가 아니라 INF 조약의 내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ABM 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방어체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ABM 체계와 요격미사일 배치를 제한한 협정이다. 방어용 탄도탄요격미사일 수를 제한했다는 취지는 맞다.

② O

SALT I의 핵심은 전략무기 경쟁을 일단 멈추는 데 있었고, ICBM 발사대 수를 당시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했다. 감축이 아니라 제한·동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START I: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 폐기'이다.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 전면 폐기는 1987년 INF 조약의 내용이고, START I는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탄두와 ICBM·SLBM 등 전략공격무기를 감축한 협정이다.

④ O

CTBT는 지하 핵실험을 포함해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대기권·우주·수중만이 아니라 지하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START와 INF를 모두 미소 군축 협정으로만 묶어 기억하면 ③에 속기 쉽다. 선지에 '유럽'과 '중거리 핵무기 폐기'가 함께 나오면 START가 아니라 INF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약 이름보다 규제 대상 무기를 먼저 연결하면 된다. ABM은 미사일방어, SALT I는 전략무기 동결, START I는 전략핵 감축, INF는 중거리핵 폐기, CTBT는 모든 핵실험 금지로 구분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BM은 방어 제한, SALT I는 동결, START I는 전략핵 감축, INF는 중거리핵 폐기, CTBT는 핵실험 전면 금지이다.

NoteBase

문 13. 근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중일전쟁
(나) 일본의 류큐 병합
(다)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
(라) 만주사변

① (나) → (다) → (가)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나) → (라) → (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 동북아시아 주요 사건의 연도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다)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 - 1876년에 체결되어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강요한 사건이다.
2. (나) 일본의 류큐 병합 - 1879년에 일본이 류큐를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 사건이다.
3. (라) 만주사변 - 1931년에 일본 관동군이 만주 침략의 계기로 삼은 사건이다.
4. (가) 중일전쟁 - 1937년에 본격적인 중일 간 전면전으로 확대된 전쟁이다.

왜 이 순서인가: 조일수호조약과 류큐 병합은 모두 19세기 후반 사건이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30년대 사건이므로 앞뒤가 분명히 갈린다.

선지별 해설

1번: X. (나)를 (다)보다 앞세운 점과 (가)를 (라)보다 앞세운 점이 모두 틀렸다. 류큐 병합은 1879년이고 조일수호조약은 1876년이므로 먼저는 (다)이다. 또 만주사변은 1931년, 중일전쟁은 1937년이므로 먼저는 (라)이다. 틀린 표현은 '(나)→(다)'와 '(가)→(라)'이고, 올바르게는 '(다)→(나)'와 '(라)→(가)'이다.

2번: X.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의 앞뒤는 맞지만, 처음 두 사건의 순서가 틀렸다. 조일수호조약이 1876년, 류큐 병합이 1879년이므로 '(나)→(다)'가 아니라 '(다)→(나)'이어야 한다.

3번: X. 류큐 병합을 1930년대 사건들 뒤로 보낸 점이 틀렸다. 또한 중일전쟁을 만주사변보다 앞세운 점도 틀렸다. 틀린 표현은 '(가)→(라)→(나)'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나)→(라)→(가)'이다.

4번: O. 조일수호조약 1876년, 류큐 병합 1879년, 만주사변 1931년, 중일전쟁 1937년의 순서이므로 '(다)→(나)→(라)→(가)'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9세기 후반의 조일수호조약과 류큐 병합을 뒤바꾸거나, 1930년대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한 묶음으로만 기억해 세부 연도를 놓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1876-1879-1931-1937의 연도 축을 머릿속에 세우면 빠르게 정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배열 문제는 각 사건의 정확한 연도를 먼저 찍고, 19세기 사건과 20세기 사건처럼 시대 구간부터 나눈 뒤 같은 구간 안에서 세부 연도를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강화도조약 1876 → 류큐 병합 1879 → 만주사변 1931 → 중일전쟁 1937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4.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은 한국전쟁 기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 이후, 스탈린은 포츠담회담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③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비밀각서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④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베르사유조약」에 참여하여 산동반도와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양도받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주요 회담·조약·각서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전후 처리의 출발점이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이 일본의 대한 우월권을 사실상 인정한 합의이다.
얄타회담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약속한 회담이며, 포츠담회담은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제시한 회담이다.
베르사유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 일본이 독일의 산둥반도 및 남양군도 관련 권익을 넘겨받는 근거가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1952년에 주권을 회복하였다.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도 체결되었으므로 진술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포츠담회담을 근거로"이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는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합의된 대일전 참전 약속에 근거한 것이며, 포츠담선언 자체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탈린은 얄타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가쓰라-태프트 비밀각서는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유지하는 대신 일본의 조선 지배권, 즉 대한 우월권을 사실상 인정한 합의이므로 진술은 옳다.

④ O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파리강화회의와 베르사유조약 체제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와 남양군도 관련 권익을 넘겨받았다. 진술의 취지가 맞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포츠담과 얄타를 바꿔 넣는 전형적 함정이다. 두 회담 모두 1945년 전후 질서와 연결되지만,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은 얄타회담이고 포츠담은 일본에 대한 항복 조건 제시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아시아 외교사 선지는 사건 이름보다 먼저 그 회담·조약이 결정한 기능을 연결해 판단한다. 얄타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포츠담은 일본 항복 조건, 샌프란시스코는 일본 주권 회복, 가쓰라-태프트는 미국의 대한 우월권 인정으로 잡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얄타는 소련 참전, 포츠담은 항복 조건, 샌프란시스코는 일본 주권 회복, 가쓰라-태프트는 조선에 대한 일본 우월권 인정이다.

NoteBase

문 15.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② 구성주의는 현존하는 무정부적 국제환경을 행위자들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전제한다.

③ 마르크스주의는 주권국가보다는 계급을 주요 행위자로 전제한다.

④ 신기능주의는 정치적 통합이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정치 주요 이론의 핵심 행위자와 통합 방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공격적 현실주의: 국가는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권력 극대화와 패권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본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의 구조와 행위자 정체성은 상호작용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를 주권국가만이 아니라 계급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작동으로 이해한다.
신기능주의: 한 영역의 통합이 인접 영역으로 파급되어 더 넓은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단순한 현상 유지보다 더 큰 권력 확보를 통해 생존을 보장하려 한다고 본다. 권력의 극대화 추구는 머시머식 공격적 현실주의의 핵심 설명이다.
2번 O: 구성주의는 국제환경을 고정된 자연상태로 보지 않고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무정부 상태 자체의 의미도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3번 O: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보다 계급, 생산관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더 주목한다. 따라서 주권국가보다 계급을 주요 행위자로 본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정치적 통합이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결이다. 신기능주의는 반대로 경제통합 같은 기능적 통합이 정치통합으로 파급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신기능주의는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은 통합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신기능주의의 핵심은 파급효과가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점인데, 방향만 바꾸면 그럴듯해 보여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론 문제는 이론명마다 '주요 행위자'와 '핵심 방향'을 먼저 대입해 보면 빠르게 판단된다. 현실주의는 국가와 권력, 구성주의는 규범과 상호작용,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신기능주의는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의 파급이라는 연결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공현은 권력, 구상은 구성, 마르크스는 계급, 신기능은 경제에서 정치로 파급이다.

NoteBase

문 16. 핵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있다.

② 왈츠(Kenneth Waltz)는 핵무기 확산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가 전장에서 직접 사용된 적은 없다.

④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공식 핵보유국 범위와 핵무기 확산에 대한 왈츠의 억지 논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PT가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구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왈츠는 핵억지가 작동하면 핵보유국의 증가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 현실주의 계열의 주장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핵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가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5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모두 NPT 비가입 핵보유국 사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핵무기 확산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표현이다. 왈츠는 핵억지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핵보유의 확산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올바르게는 '왈츠는 핵무기 확산이 전쟁 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다.
③ O: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 전장에서 핵무기가 직접 사용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범위 설정이 맞다.
④ O: NPT는 미국, 러시아(구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조약상 기준은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 장치를 제조·폭발시킨 국가이다.

오답 포인트

핵확산에 대한 학자 입장을 뒤바꾸는 함정이 핵심이다. '핵확산은 위험하다'는 일반 상식 때문에 왈츠까지 확산비관론자로 오인하면 ②를 옳은 선지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핵무기 문항은 먼저 NPT의 공식 핵보유국 5개국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학자의 입장이 확산 억제론인지 확산 위험론인지 구분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인물 견해 선지는 핵심 방향어가 억제인지 고조인지부터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NPT 공식 핵보유국은 미·러·영·프·중 5개국이고, 왈츠는 핵확산이 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입장이다.

NoteBase

문 17.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치 및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제시하였다.

② 양안 통일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포함하였다.

④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복원시키는 ‘일대일로’를 구상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핵심 정치 구호, 대만 정책, 헌법 개정, 일대일로 구상의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정치 구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을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함께 추진하는 대외전략 구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시진핑은 집권 이후 국가 부흥의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이를 '중국의 꿈'으로 제시하였다. 시진핑 시기 국가전략의 상징 구호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형식적으로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표현이다. 중국은 양안 통일의 전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대만을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대만의 별도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다.
3번: O.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은 2018년 중국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헌법에 반영되었다. 시진핑 시기 정치 이념이 헌법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설명이므로 맞다.
4번: O. 일대일로는 육상 경로인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 경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함께 추진하는 구상이다.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복원·연결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2번은 '평화통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유화 노선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이다. 평화통일 추구와 대만 주권 인정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를 섞으면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진핑 시기 중국 관련 선지는 먼저 핵심 구호, 통일 원칙, 헌법 반영 여부, 일대일로 구성요소처럼 공식 노선의 고정 표현을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특히 대만 문제는 '주권 인정 여부' 한 문장만 확인해도 오답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중국의 꿈은 부흥, 대만 정책은 하나의 중국, 일대일로는 육상+해상, 시진핑 사상은 헌법 반영이다.

NoteBase

문 18.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인 국정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다.

②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③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

④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협조체제를 만들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가의 수직적 통치가 아니라 국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조정하는 협력적 통치라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 차원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규범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국가중심 통치는 국가의 위계적 권한과 수직적 국정운영이 중심이고,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중 행위자와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수직적인 국정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의 수직적 통치가 강화되어 생긴 개념이 아니라, 국가만으로는 초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올바르게는 국가 중심의 위계적 통치를 넘어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적 조정 필요성 속에서 등장하였다.
2번: O. 세계화로 환경, 인권, 금융, 보건 같은 문제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의제가 늘어났고,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3번: O.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국제기구처럼 국가 이외의 행위자도 중요한 주체로 참여한다.
4번: O.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 협력과 규범 형성을 통해 공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질서를 뜻하므로 선지의 설명이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글로벌 거버넌스를 정부의 통치방식 확대판으로만 이해하면 1번 같은 선지에 끌린다. 이 개념의 핵심은 정부의 위계적 지배가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함께 만드는 협력적 조정체계라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버넌스 문제가 나오면 먼저 행위자가 국가만인지, 아니면 국제기구·기업·NGO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통치 방식이 수직적 명령인지 수평적 협력인지 구분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 단독의 위계가 아니라 다중 행위자의 수평적 협력이다.

NoteBase

문 19.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닉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무효화하고 「전쟁권한법」을 확정했다.

② 「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였다.

③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파견된 미국 군대는 의회의 전쟁선포나 승인 결의안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 철수해야 한다.

④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무력사용 이전 의회와 최대한 협의해야 하며, 병력 파견 시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미국 전쟁권한법의 입법 취지와 대통령의 무력사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 장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율권을 넓힌 법이 아니라, 의회가 협의·보고·기간 제한을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전쟁권한법 = 1973년 의회가 제정한 War Powers Resolution으로, 대통령의 해외 무력사용을 의회와의 협의, 48시간 내 보고, 60일 제한으로 통제하려는 장치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대통령의 재량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의회의 전쟁 통제권을 회복하는 장치이다.
또한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병력을 투입하면 48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 의회의 전쟁선포나 구체적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닉슨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여 법으로 확정했다.
- 따라서 이 선지는 제정 경위를 정확히 설명한다.

② X
-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율권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베트남전 이후 확대된 대통령의 단독 군사행동을 의회가 제어하려는 조치였다.
- 틀린 표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 올바른 표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무력사용을 제한하고 의회의 전쟁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③ O
- 의회의 전쟁선포나 구체적 승인 없이 투입된 미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종료·철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쟁권한법의 핵심 제한이다.
- 다만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이 허용될 수 있으나, 선지의 핵심 진술 자체는 맞다.

④ O
-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경우 무력사용 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병력 투입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따라서 이 선지는 협의 의무와 보고 의무를 올바르게 묶어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전쟁권한법을 대통령 권한 강화법처럼 뒤집어 서술한 데 있다. 이 법은 베트남전기의 대통령 주도 전쟁 수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통제장치라는 방향을 잡으면 ②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국 전쟁권한법 문제가 나오면 먼저 법의 방향이 대통령 재량 확대인지 의회 통제 강화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협의, 48시간 보고, 60일 제한이라는 세 축이 보이면 정답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 강화가 아니라 의회 통제 회복이며, 키워드는 사전 협의·48시간 보고·60일 제한이다.

NoteBase

문 20.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기구 및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

② 국제통화기금

③ 국제부흥개발은행

④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전후 무역 질서의 산물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의 산물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뒤 평화 유지와 집단안보를 위해 만든 국제기구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제2차 세계대전 뒤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지원을 위해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 기구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전후 복구와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든 세계은행 체제의 출발점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체결된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긴 기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체제 아래에서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② O: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바탕으로 전후 국제통화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므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긴 기구에 해당한다.
③ O: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전후 복구와 개발 금융을 담당하기 위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출범한 기관이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제도에 해당한다.
④ 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전후 자유무역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에 체결된 협정이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제도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혼동하거나, 전간기 국제기구와 전후 국제경제기구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①을 지나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국제기구"라는 큰 범주만 보고 시대 구분을 놓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나 협정을 묻는 문항은 먼저 형성 시기를 전간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눈다. 그다음 베르사유 체제면 국제연맹, 브레턴우즈 체제면 IMF와 IBRD, 전후 무역 질서면 GATT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제연맹은 1차 대전 뒤, IMF·IBRD·GATT는 2차 대전 뒤의 산물이다.

NoteBase

문 21.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의 차이가 문명의 충돌을 가져올 것이며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갈등의 원인은 문명 내부에서의 충돌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세계 문명을 서유럽,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브정교, 라틴아메리카 문명 등으로 구분하였다.

④ 유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연합해 서유럽 문명과 대결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에서 갈등의 중심을 문명 간 충돌로 보는지, 그리고 대표 문명권 구분과 유교·이슬람 연계 구상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헌팅턴은 냉전 이후 국제정치의 핵심 갈등 축이 이념보다 문명이라고 보았다. 주요 충돌은 문명 내부보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단층선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서구·유교·일본·이슬람·힌두·슬라브정교·라틴아메리카 등의 문명권을 구분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헌팅턴은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냉전 이후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문명충돌론의 핵심은 이념 대립보다 문화적 정체성의 충돌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문명 내부에서의 충돌"이다. 헌팅턴이 강조한 것은 같은 문명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충돌이다. 올바르게는 "갈등의 원인은 문명 간 충돌 때문"이라고 고쳐야 한다.
3번: O. 헌팅턴은 세계를 몇 개의 주요 문명권으로 구분하였고, 선지의 배열은 그가 제시한 대표적 문명 분류의 취지와 부합한다.
4번: O. 그는 유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연계하여 서구 문명에 맞설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른바 유교-이슬람 연계 가능성은 문명충돌론의 대표 논점이다.

오답 포인트

문명충돌론을 "문명 내부 갈등론"으로 뒤집어 놓은 표현에 흔들리기 쉽다. 이 이론은 내부 분열보다 문명 간 단층선, 특히 서구와 비서구 문명 사이의 긴장을 강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헌팅턴 관련 선지는 먼저 갈등의 단위가 문명 내부인지 문명 간인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대표 문명권 분류와 유교-이슬람 연계 같은 핵심 키워드가 맞는지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헌팅턴 = 냉전 후 갈등의 축은 문명 간 단층선, 대표 키워드는 유교-이슬람 연계이다.

NoteBase

문 22. 국제협력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들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 때문에 협력을 달성하기 어렵다.

②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③ 패권국이 국제규칙 및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재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력이 촉진되고 지속될 수 있다.

④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 변하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현실주의가 국제협력을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구성주의적 설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국제구조와 힘의 분포가 국가의 행동과 협력의 한계를 규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이 규칙과 공공재를 제공할 때 국제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협력 설명이다.
구성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협력의 조건을 바꾼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들은 무정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본다.
무정부성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는 진술은 신현실주의의 기본 주장에 해당한다.

② O
신현실주의는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상대방이 더 많이 이익을 얻으면 장차 힘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력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③ O
패권국이 국제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면 협력이 촉진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패권안정론에 가깝다. 이는 현실주의 계열에서 국제협력의 조건을 설명하는 논리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 변하면'이라는 표현이다. 이익과 정체성의 사회적 변화로 협력을 설명하는 관점은 구성주의에 가깝다. 신현실주의는 정체성 변화보다 무정부 구조, 상대적 이익, 힘의 분포가 협력 여부를 좌우한다고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협력이라는 결론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근거를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에 두었다는 점이 함정이다. 신현실주의는 구조와 상대적 이익을,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규범 변화를 핵심 변수로 본다는 차이를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근거가 무정부성, 힘의 분포, 상대적 이익이면 신현실주의 쪽으로 본다. 반대로 정체성, 규범의 내면화, 상호구성 같은 표현이 나오면 구성주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패권국의 공공재 제공과 규칙 설정은 패권안정론의 단서로 본다.

암기 포인트

신현실주의는 구조와 상대적 이익,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규범,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공공재 제공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3. 일본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시다 독트린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진입함으로써 자국의 군비지출을 억제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는 외교 노선이다.

② 1987년 미국 달러화 대비 자국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플라자합의(Plaza Accords)를 주도하여 대미투자를 증가시켰다.

③ 하토야마 내각은 2009년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라는 기치하에 종래의 '대미추종' 외교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④ 아베 내각은 쿼드(QUAD)에 참여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축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외교정책의 대표 노선과 정권별 대외전략을 시기와 키워드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요시다 독트린: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면서 재무장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노선이다.
플라자합의: 1985년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이 달러 강세 시정을 위해 맺은 다자 합의로, 엔화 절상을 촉진하였다.
하토야마 내각: 2009년 대등한 미일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세우며 대미 의존 외교를 조정하려 하였다.
아베 내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QUAD 협력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요시다 독트린은 전후 일본이 미국 중심 질서에 편입되는 대신 군사부담을 낮추고 경제부흥을 우선한 노선이므로 설명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1987년"과 "자국 엔화 가치 상승시키는 플라자합의를 주도"라는 표현이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의 다자 합의이며 일본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대미투자가 증가하였다"라고 정리한다.
3번: O. 하토야마 내각은 2009년 출범 뒤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기존의 대미추종 외교를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맞다.
4번: O. 아베 내각은 QUAD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일본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핵심 파트너로 위치시키려 했으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플라자합의의 연도를 1987년으로 바꾸거나 일본이 이를 단독 주도한 것처럼 서술하면 쉽게 흔들린다. 일본 외교사 문제는 사건명만 외우면 틀리고, 연도와 주체를 함께 묶어 두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물·내각·합의의 시기를 확인하고, 다음에 그 대상의 대표 외교노선을 붙여 판단한다. 연도와 주체가 어긋나면 문장 전체가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요시다=안보는 미국, 경제는 일본 / 하토야마=대등한 미일 / 아베=인도-태평양·QUAD / 플라자합의=1985년 엔고

NoteBase

문 24. 1994년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인간 발전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규정된 '정치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질병과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에서 최소한의 보호 보장

② 국가나 외국 또는 폭력적인 개인과 사회단체, 국내적 위해, 약탈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③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정보의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보호

④ 전통적인 관계와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분파적·인종적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94년 UNDP 인간안보의 7개 영역 가운데 정치안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보건안보·개인안보·공동체안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치안보: 국가의 억압과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을 뜻한다. 결정 차이축은 위협의 주체가 국가권력과 정치적 억압인지 여부이다. 키워드는 인권, 사상·정보의 자유, 국가 억압으로부터의 보호이다.
보건안보: 질병과 비위생적 생활조건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을 뜻한다. 키워드는 질병, 감염, 비위생적 환경이다.
개인안보: 국가, 타국, 범죄집단, 개인의 직접적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을 뜻한다. 키워드는 신체 안전, 폭력, 범죄이다.
공동체안보: 전통적 관계와 문화적 정체성이 파괴되거나 종파적·민족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안전을 뜻한다. 키워드는 공동체, 정체성, 종파·민족 갈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질병과 비위생적 생활습관으로부터의 보호는 정치안보가 아니라 보건안보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정치안보로 읽히게 만드는 전체 분류이다. 올바르게는 질병과 비위생적 생활조건으로부터의 보호는 보건안보이다.

② X
국가나 외국, 폭력적 개인과 사회단체, 국내적 위해, 약탈 같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은 개인안보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정치안보의 내용처럼 볼 수 있게 만드는 분류이다. 올바르게는 물리적 폭력과 신체적 위해로부터의 보호는 개인안보이다.

③ O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정보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은 정치안보의 핵심이다. 정치안보는 국가권력의 억압, 고문, 표현의 자유 침해 같은 정치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므로 옳다.

④ X
전통적인 관계와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분파적·인종적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은 공동체안보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정치안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분류이다. 올바르게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전통적 관계를 지키고 종파적·민족적 폭력에서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안보이다.

오답 포인트

인간안보의 세부 영역은 모두 '사람을 보호한다'는 공통 문장을 쓰기 때문에 보호 대상만 보고 섞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위협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 데 있다. ②는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개인안보이고, ④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분파·인종 갈등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안보인데, 이를 정치안보와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위협의 주체와 보호 대상을 구분하면 된다. 질병과 생활조건이면 보건안보,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면 개인안보, 공동체 정체성과 종파·민족 갈등이면 공동체안보, 국가의 억압과 인권 침해 및 사상·정보 통제이면 정치안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치안보는 국가 억압과 인권 침해의 문제이고, 개인안보는 물리적 폭력의 문제이며, 공동체안보는 정체성과 집단갈등의 문제이다.

NoteBase

문 2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 1946년 UN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196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① 국제노동기구(ILO)
② 국제통화기금(IMF)
③ 만국우편연합(UPU)
④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베르사유조약 근거, UN 전문기구 편입, 1969년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단서를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과 본부 위치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 확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통화 협력과 금융안정을 위한 기구이다. 만국우편연합(UPU)은 국제 우편 제도를 통일·조정하는 기구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북대서양조약에 따른 집단안보 군사동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을 근거로 창설되었고, 1946년 UN 최초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제시된 세 단서가 모두 일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국제통화 질서와 금융안정을 위한 기구로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성립하였고 본부도 제네바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올바르게는 '국제노동기구(ILO)'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만국우편연합(UPU)'이다. UPU는 국제 우편업무의 통일과 조정을 위한 기구이며 1874년 베른조약을 바탕으로 출범하였다. 제시된 베르사유조약 제13편, 1969년 노벨평화상 수상과 연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국제노동기구(ILO)'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다. NATO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에 따라 결성된 군사동맹으로, 노동문제나 UN 전문기구 지위와 무관하다. 올바르게는 '국제노동기구(ILO)'이다.

오답 포인트

제네바 본부라는 단서만 보고 여러 국제기구를 떠올리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과 '1969년 노벨평화상'이며, 이 두 단서를 함께 만족하는 기구는 ILO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 문제는 기능만 보지 말고 설립 근거 조약, UN 체계 편입 시기, 본부 위치, 대표 수상·성과 같은 고유 식별자를 묶어 판단하면 된다. 금융이면 IMF, 우편이면 UPU, 군사동맹이면 NATO, 노동기준이면 ILO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ILO = 1919 베르사유조약 제13편 + 1946 UN 전문기구 + 1969 노벨평화상이다.

NoteBase